

탈북인의 신민적 정치참여*

김화순 (제1저자, 한신대학교)

전태국 (교신저자, 강원대학교)

국문요약

이 연구는 지난 정부에서 수년간 탈북인들이 돈으로 매수되어 친정부 시위와 국정원의 비밀댓글 공작에 동원되었던 사건들에서 보인 탈북인의 독특한 신민적 정치참여 행태를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권력의 동원과정에서 드러난 탈북인의 신민적 정치참여는 ‘탈북’이라는 경험을 공유한 집단에 고유한 정치지향성의 분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에서 초기 정치사회화의 효과로 북한주민의 특성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한국 상황에서 탈북인이 생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분단체제에서 남북한 주민 양자에게 배태되어진 분단인 고유의 정치지향성이 표출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날 평화체제 이행과정의 문 앞에 서있는 남북 주민 사회통합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캐릭터가면과 그것의 응용으로서 문화가면의 개념에 근거하여 탈북인과 남한인을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양자에게 배태된 정치지향성을 살펴보고, 이주자 정치사회화이론에 비추어 탈북인 정치참여 행위를 해석하였다. 저항이론, 노출이론, 전이이론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신민적 정치참여, 캐릭터가면, 문화가면, 저항이론, 노출이론, 전이이론

* 본 원고는 2018년 평화재단에서 후원하는 ‘시민성에 기반한 남북한 평화공동체 만들기’ 제 7차 콜로키움(2018.4.17)에서 초고가 발표되었다. 평화재단/평화연구원 관계자 및 논문의 내용을 보다 명료화하도록 도움을 주신 남북시민통합연구회 동료여러분께 감사드린다.

I. 탈북인은 어떻게 국가권력의 동원에 부응하게 되었는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대통령의 당선 이후 탈북인 사회는 깊은 불안감에 빠진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새 정권의 탄생과 함께 전개될 남북관계의 급변으로 혹시 강제북송이 추진되지 않을까 불안해서 외국으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탈북인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필자도 새 정부 구성 이후 문재인정부가 불안해서 외국으로 떠나야겠다는 탈북인을 만난 적도 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박근혜대통령을 파면하고, 세상을 바꾸어나가는 과정에서 일반시민사회가 성취감과 기쁨을 누렸던 것과는 달리 탈북인 사회는 충격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인 수는 2016년 11월에 3만 명을 넘었으며 2017년 9월 현재 3만 890명에 달한다.¹⁾ 경험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겠으나 탈북인의 상당수는 한국의 좌·우 이념갈등 구조 속에서 우파에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진다. 우파가 내세우는 반북주의에서 자신의 탈북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발견하고, 친북의 의심을 받는 좌파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탈북인 단체들은 대북전단을 살포하여 북한인권운동이나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고 미사일시험발사를 규탄하는 반북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 탈북인들

1) 통일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탈북인 수는 30,805명이다. 그 중 여성의 비율이 70%를 넘는다. 2001년에 탈북인 수가 처음으로 1천명을 넘었고, 2006년부터는 매년 2천명을 넘었고, 2008년에는 2,803명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권좌에 오른 2012년에는 탈북인 수가 급감하여 1,502명으로 줄었고, 2015년에는 1,275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1,418명에 달하였고 여성의 비율은 79%이었다.

은 극우적 성향의 정치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잦았다. 세월호와 같이 일반 시민들의 깊은 공감과 지지를 받아온 사안에 대해 일부 탈북인은 정반대편의 대열에 앞장서왔다.

역대 정부는 탈북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본격적인 탈북이주가 시작된 지난 20여년동안 탈북행위는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귀순’으로 해석되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증명하고, 남한 체제의 우월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되었고, 선거나 정권 위기 상황에서 국면 전환과 선거승리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2016년 들어 탈북은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2016년 4월 총선직전, 북한음식점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통일부가 공개발표를 하여 일반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동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주민의 탈북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탈북인들의 극우보수적 정치참여는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이어지는 탄핵국면에서 극적으로 표출되었다. 많은 탈북인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가 혹은 동원되었다. “대한문 앞에는 대통령 탄핵과 파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독재자 박정희의 권위주의 체제와 그의 딸 박근혜의 무책임-무능 체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충성을 보내는 전근대적 ‘신민’ 의식에 젖은 고령의 세대였다(전태국, 2016).” 여기에는 고령의 한국인들 외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참여하였는데, 그들 중의 하나가 탈북인이었다. 탈북인들은 북한인권과 김정은 독재규탄을 주제로 하여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여왔기 때문에 그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이 이미 낯설지 않게 되었지만, 태극기 집회への 지속적인 조직적인 탈북인 참여는 특별히 시선을 집중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에서 많은 탈북인들이 태극기집회에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은 대선 일주일 전인 2017년 5월 3일에 있었던 ‘탈북인 3,000인 망명’ 기자회견이었다. 문재인후보가 대통

령이 되면 안보가 불안해서 자신들은 외국으로 망명을 하겠다는 것이다.²⁾ 이같은 망명발표는 탈북인에게 무관심했던 일반국민들에게 탈북인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감이나 우려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탈북인들이 탄핵이나 대선국면에서 보여준 반민주적 언행이나 호전적 통일의식은 일반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사회적 거리감을 더 크게 하는 후유증을 남겼다. 촛불민주화 이후 소수자인 그들에게 부쳐진 ‘탈북자’라는 꼬리표는 일종의 ‘비시민(非市民)’의 징표가 되면서 향후 한국 시민사회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물론, 한국 정치에서 집회와 선거에서 알바동원은 이미 199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으로 탈북인에 국한된 일은 아니었다. 총선과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 대학생들이 일당을 받고 선거운동원으로 동원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반대파를 음해하기 위해 은밀하게 진행되어 온 범죄행위에 탈북인들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충격적이다. 예를 들어, 탈북인들은 세월호 반대집회의 경우에는 5개월 동안 39회에 걸쳐 연인원 1,259명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위동원시 탈북인 1인당 2~3만원의 수당이 제공되었다.³⁾ 이러한 뒷면의 거래들은 ‘탈북어버이연합’과 ‘어버이연합’의 주도권 싸움에서 불거진 결과 어버이연합-전경련-청와대 간의 내밀한 관계가 적나라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2) 일부 탈북인들은 2017년 5월 3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보가 불안하니 자신들은 외국으로 망명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바 있다. “탈북자3000명, 문재인 당선시 해외망명 추진한다.” MBC 뉴스(온라인), 2017년 5월 3일; <<https://www.youtube.com/watch?v=1SmTiW4mS1s>>; “탈북자단체 ‘文당선되면 탈북자 3000명 집단 망명하겠다’” 『조선일보』(온라인), 2017년 5월 3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3/2017050302138.html>

3) 2016년 jtbc 뉴스룸을 중심으로 4.19일부터 28일까지 어버이연합관련 기사들이 매일같이 보도되었다.

탈북인들이 일당을 받고 집회에 참여하는 ‘알바 시위꾼’으로 혹은 국정원 산하의 ‘댓글부대’로서 일반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에 여론의 못매가 뜨겁다.⁴⁾ 물론 이 사태의 가장 근본적이고 무거운 책임은 국가권력에게 있다. 국가권력이 직접 탈북인을 돈으로 매수하고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검찰수사를 통해 살살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중대한 ‘국가범죄’의 영역에 속한다. 국가 권력기관인 국정원은 탈북인들을 동원하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정치공작을 자행하였다. 이를테면 탈북인 지식인단체인 ‘NK지식인연대’ 중 고위임원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여 인터넷상에 북한 문제뿐 아니라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이전 등 정치현안에 대해 정부를 두둔하는 글을 올리게 하였으며, 탈북인들은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에 동원되어 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의혹에 대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에 들어갔고, 통일부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연합뉴스, 2017.8.18.). 이는 국정원과 국가권력이 사회적 약자인 탈북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국가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범죄에는 이에 준한 처벌이 따르고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와 책임소재의 규명이 밝혀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며 연구의 영역을 포함한 법적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남북통합의 미래와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다.

반세월호 집회나 태극기 집회에 조직적 참여로 표현되는 탈북인의 극단적 우파로의 정치적 쏠림현상과 관제데모에의 참여, 일당시위로 나타

4) 칼럼 “누가 탈북자를 ‘알바시위꾼’으로 만들었나?”에서 김연철(2016)은 ‘어버이연합’에 동원된 탈북자들은 정착지원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며 북풍 공작이나 어버이연합의 정치동원의 책임자를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 탈북자인권을 재정립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난 탈북인의 신민적 정치지향은 북한에서 초기 정치사회화의 효과로 북한주민의 특성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가? 아니면 탈북인을 국가권력의 도구로 활용해온 남한사회화의 영향 때문으로 탈북인이 한국에서 생존하기 위한 선택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분단체제에서 남북한 주민 양자에게 배태되어진 분단인 고유한 정치지향성의 분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남북 주민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분단정치의 한국 상황에서 탈북인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선택의 결과라면, 시민성에 기반한 정착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될 것이며, ‘탈북’이라는 경험을 공유한 탈북인 집단에 나타나는 고유한 정치지향성의 분출이라면 단순히 정착정책 뿐 아니라 탈북추이의 관측과 이들 이주가 한국 사회에 주는 영향, 북한인권 전반에 걸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탈북인 고유한 특질의 반영이 아니라 남북한을 막론하고 분단체제하 주민들이 가졌던 정서나 정치지향성의 분출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상의 쇠퇴는 분단체제 극복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경우는 이 현상이 북한출신 주민 일반에게 잠재된 신민적 지향성의 발현이었을 경우이다. 이는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남한인들이 그간 민주화운동의 역사 속에서 쌓아올린 ‘시민성’과 북한인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신민성’이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내적통합의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을 예고한다.

이같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제기한 캐릭터 가면(Charaktermaske) 개념에 기반하여 탈북인의 유형을 분류하고 ‘신민문화’ 문화가면과 ‘권위주의’ 문화가면의 개념을 분석도구로 탈북인과 남한인을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II. 탈북인의 ‘캐릭터 가면’과 ‘문화 가면’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권력이나 탈북인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탈북인 자신의 정치지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간의 극우편향적 정치참여 현상이 의미하는 바를 학술적으로 규명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탈북인은 남한사회에 정착하면서 맞닥뜨리는 사회적 관계에 구속되어 독특한 ‘캐릭터’의 ‘가면’을 쓴 사람으로 고찰한다. ‘캐릭터 가면’(Charaktermaske)이란 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에게서 유래한다(MEW 23: 91).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사랑과 윤리의 장미 빛 속에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범주의 인격화”로서 고찰하였다(Karl Marx, 1867: 『자본론』 제1권 초판본 서문, MEW 23: 16). 인간은 개별적으로는 아무리 주관적으로 사회관계를 초월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의연히 이 관계의 산물이다. 사람들은 “특정한 사회관계와 이해관계의 담지자”이다. 그들은 ‘자본가’나 ‘노동자’ 혹은 ‘토지소유자’의 ‘캐릭터 가면’을 쓴다.⁵⁾

마르크스의 ‘캐릭터 가면’은 탈북인의 사회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대부분의 탈북인은 남한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탈북인 조사(김수암/김화순 외 2016)에 의하면, “나는 진정한 남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에 탈북인 응답자의 77.2%가 동의하였고(‘매우 동의’ 47.7%, ‘다소 동의’ 29.5%), 4%만이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남한에서 잘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5)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에 의하면, 사람을 가리키는 “Persona”는 원래는 “고대 극장의 가면을 가리키는 로마의 표현이었으며, 키케로(Cicero)에게서 이 말은 누군가가 타인에게 나타날 때 쓰는 캐릭터마스크의 의미로 승화되었다.”(Institut für Sozialforschung, 1956: 42).

해보겠다”는 의견에 85.6%가 동의하였고(‘매우 동의’ 58.5%, ‘다소 동의’ 27.1%), 3%만이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남한사회에서 고유하게 발전된 생활양식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에 80%가 동의하였고(‘매우 동의’ 44.1%, ‘다소 동의’ 35.8%),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는 2.4%이었다. 또한 자녀들에게 남한의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87.3%(매우 동의: 65.6% + 다소 동의: 21.7%)가 동의하였고, 2.3%만이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들을 즐거운 기분으로 배우려고 한다”는 의견에 85.6%가 동의하였고(매우동의: 55.2% + 다소 동의: 30.4%), 0.3%의 응답자만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탈북인들은 남한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자 한다.

1. 탈북인의 캐릭터가면 유형: 소수자, 주변인, 방랑인

그러나 적응은 쉽지 않다. 탈북인들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소외된 존재로 살기도 하고, 북한에서 보낸 자신의 삶의 시간을 나름대로 소중하게 여기려하기도 하고, 혹은 암울한 삶을 털어버리고자 남한을 떠나고 싶어하기도 한다. 따라서 탈북인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쓰게 되는 ‘캐릭터 가면’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소수자’의 캐릭터이다. ‘소수자’(Minderheiten)란 생활조건과 일상적 생활태도의 면에서 그리고 집단 전형적인 규범과 가치의 면에서 다수자와 구별되는 집단을 가리킨다(Scherr A., 2001: 518). ‘소수자’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시달린다. 탈북인은 자신을 ‘외부인’으로 느끼며, 편견과 차별 속에 주눅 들어 살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탈북인 열 명중 절반 가량은 ‘소수자’ 캐릭터의 가면을 쓰고 있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편견에 찬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의견에 6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탈북인은 이등국민이다”는 의견에

48%가 동의하였다. 더욱이 최근의 한 다른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탈북인은 남한인과 접촉이 거의 없이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 “친구나 동료,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북한이탈주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남한인은 5.7%에 불과했고, 지난 1년 동안에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눴본 경험”이 있는 남한인은 6.6%이었다(윤인진 외, 2014).

두 번째 캐릭터는 “주변인”이다. 주변인(marginal man)이란 파크(Robert Ezra Park)가 말한 바와 같이,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방인인 사람”(Park, 1950: 356)을 가리킨다. 탈북인은 남한 사회에 동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두 개의 상이한 문화적 명령의 압력에 시달린다. 조사에 의하면 탈북인 열 명중 네 명 정도는 ‘주변인’ 캐릭터의 가면을 쓰고 있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정신적 뿌리는 북한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의견에 탈북인 응답자의 40%가 동의하였고(‘매우 동의’ 18.4%, ‘다소 동의’ 21.7%), “북한에 남아 있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50%가 동의하였다(‘매우 동의’ 20.4%, ‘다소 동의’ 29.4%).

세 번째 캐릭터는 ‘방랑인’이다. ‘방랑인’(Wanderer)이란 소속감이나 정체성이 종속적 역할밖에 갖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취업기회나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해 국경을 넘어 주거를 바꾼다. 탈북인들은 자신의 문화, 유산, 정체성을 탈가치화하는 편견과 차별에 불만을 품고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며 북한으로 되돌아가거나 제 3국에 가기를 원한다. 근간에 북한으로 되돌아갔거나 유럽으로 간 탈북인은 여기에 속한다. 조사에 의하면 탈북인 열명중 한 두 명 정도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남한을 떠나 다

른 나라로 가고 싶다”는 의견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탈북인이 16.7%를 차지하였다.

〈표 1〉 탈북인의 ‘캐릭터 가면’의 유형

유형	의견	동의	반대
소수자	“남한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편견에 찬 시선으로 바라본다.”	63.3%	35.7%
	“탈북인은 이등국민이다.”	48.3%	51.3%
주변인	“남한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정신적 뿌리는 북한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40.1%	30.5%
	“북한에 남아 있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49.8%	19.4%
방랑인	“나는 남한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	16.7%	82.7%

출처: 김수암/김화순 외, 2016. 조사자료를 근거로 필자가 재구성.

여기서 우리의 중심문제를 조명한다. 탈북인들의 극우적 정치행태는 자신의 소외 처지를 떨쳐버리려는 ‘인정투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탈북인들은 가치와 존중이 박탈된 ‘비대칭적 인정’(asymmetrische Anerkennung)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위의 조사에 의하면 탈북인의 과반수(54.7%)가 자신이 ‘북한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탈북인의 극우적 정치행태는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시민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남보다 더 두드러지게 국가에 충성하는 행동을 감행하여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일종의 ‘인정투쟁’을 전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동등한 참여가 방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중되지 못하는 개인적 경험이 탈북인 전체에 일반화됨에 따라 인정관계의 확대를 바라는 집합적 요구가 태극기 집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행위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 그들을 동원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정치적 소수자로서 ‘소외’의 캐릭터 가면을 쓴 탈북인이 스스로 자발적 주체로서 남한사회에서 그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한 일종의 ‘인정 투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북한에서 습득한 초기 정치사회화의 효과가 그 후 남한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데도 사라지거나 약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탈북인은 북한사회에서 정치사회화를 통해 독특한 세계상과 이념을 내면화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체화한 이념이나 세계상은 일찍이 막스 베버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의 행동의 방향을 규정하는 ‘전철수’(轉轍手, Weichensteller, Switchman)⁶⁾의 역할을 수행한다(전태국 2013a: 232). 탈북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세계상 혹은 이념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문화가면’이라 부를 수 있다. ‘문화가면’(cultural masks)은 허프만(Terry Huffman)이 정의한 것처럼, “한 개인이 주류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형성하는 개인적 인증적 정체성”을 가리킨다(Huffman, 2001: 6).

2. 신민 문화가면

조사에 의하면 탈북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문화 가면’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신민문화’ 가면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주의’ 문화가면이다. 북한의 국가권력은 북한 주민들을 일상적으로 동원해왔고, 주민들은 신민으로서 지배체계에 대한 복종을 의무와 미덕으로 받아들였던 수십 년간의 역사가 탈북인들에게 체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탈북인의 정치문

6) “인간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물질적 혹은 관념적 이해관심이다. 그러나 이념에 의해 창출된 세계상(Weltbilder)이 ‘전철수’로서 이해관계의 동학에 의해 추진되어온 행동의 궤도를 규정했던 경우가 매우 빈번하였다.”(Weber, “세계종교의 경제윤리, 비교종교사회학적 시도, 서문,”(1915), p252).

화는 아몬드/버바(Almond/Verba, 1963)가 말하는 ‘신민문화’(Subject Political Culture)에 의해 특징지워질 수 있다.⁷⁾ ‘신민문화’에서 주민들은 자신을 정치의 수동적 객체로 보고 권위에 순종적이다. 주민과 정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수동적 관계”이다(Almond/Verba, 1963: 19f.). 주민들은 그들의 편에서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능동적 충동이 결여되어있다. 그들은

7) 아몬드/버바(Almond/Verba, 1963)는 ‘신민적 정치문화’에 더하여 두 가지 정치 문화를 제시한다. 하나는 ‘교구적 정치문화’(Parochial Political Culture)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적 정치문화’(Participant Political Culture)이다. ‘교구적 정치문화’의 예는 종교적, 가족적, 혹은 씨족적 유대가 지배적인 아프리카의 부족사회와 유럽 중세의 봉건문화이다. 여기서 지배자는 무제한적 권위를 가지며, 주민은 정치에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고, 정치적 지식이 빈곤하고 비능동적이고 어떤 정치적 역할도 갖지 않는다. 정치체계에 대해 어떤 기대도 갖지 않으며 정부의 의도를 숙고없이 수행한다. 주민들은 오직 직접적 환경만을 본다. ‘참여적 정치문화’에서 주민들은 능동적 참여가 특징적이다. 주민은 광범위한 지식과 교육을 갖고 있으며, 정치생활의 형성에 구성적 비판적으로 개입한다. 교구적, 신민적, 참여적 정치문화는 이론적으로 구성된 이념형이다. 현실에서는 혼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아몬드/버바는 네 가지 유형의 ‘혼합된 정치문화’를 제시한다. 즉 ‘교구적-신민적’, ‘신민적-참여적’, ‘교구적-참여적’ 문화와 ‘시민적 정치문화’(Civic Culture)이다. 아몬드/버바에 의하면 강력한 ‘참여문화’는 타협이 어렵고 고도의 과민한 과정에 처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 ‘시민문화’가 가장 체계안정적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시민문화’는 ‘참여적’, ‘신민적’, ‘교구적’ 지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향들과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다 전통적인 태도의 유지와 ‘참여적’ 지향과의 융합은 하나의 균형적인 정치 문화를 낳는다. 이 균형적 정치문화에서는 정치적 활동, 개입, 합리성이 존재하지만 수동성, 전통, 교구적 가치에의 헌신에 의해 균형을 유지한다.”(Almond/Verba, 1963: 30). ‘시민적 정치문화’에서는 강력한 ‘참여’ 지향이 있고, 동시에 ‘신민문화’의 요소도 존재한다. 정치문화의 비참여적 요소들이 지배자의 결정에 대해 적어도 기본적인 수용과 복종을 통해 정치체계의 통치가능성을 보장한다. 아몬드/버바가 제시한 ‘시민문화’에는 미국과 영국의 민주주의와 강력한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다. 아몬드/버바가 독일에 대해 예측한 비관적 전망은 현실과 맞지 않았다. 전후 독일에서 가치와 태도의 변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상태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보다 훨씬 덜 불안정적으로 출현케 하였다. 실로 독일은 “안정적 민주주의 모델”로 전진하였다(Christian Fenner, 1993: 514).

아주 제한된 범위의 정치적 지식과 정치적 교육을 갖고 있을 뿐이며, 자기 자신을 정치적 행위자로 보지 않는다. 아몬드/버바는 19세기의 독일 빌헬름 제국을 ‘신민문화’의 전형적 예로 들었지만, 오늘의 21세기 북한이 전형적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독재체제에서 형성되었던 탈북인의 ‘신민문화’가 남한에 정착한 후에도 국가권력에 의한 정치적 동원에 순응하는 행위로 표출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남한에 온 이 후에도 탈북인의 신민적 속성은 변하지 않아 국가권력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호명 당했을 때 그들은 국가의 부름에 순응했다고 볼 수 있다. 탈북인이 쓴 ‘신민’의 문화가면은 남한인의 것보다 훨씬 더 강고한 것으로 보인다.

‘신민문화’는 두 가지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에 의해 측정하였다. 하나는 “남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를 잘 따르는 국민들이다”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는 의견이다. 아래 <표 2>는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와 상술의 김수암/김화순외 조사(2016)에서 ‘신민문화’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표 2> 신민문화: 남한인과 탈북인 비교

	남한인		탈북인	
	찬 성	반 대	찬 성	반 대
1.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35.1	43.7	43.5	23.8
2. 남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를 잘 따르는 국민들이다	29.9	49.4	36.6	26.9

출처: 남한인 조사는 ‘한국종합사회조사(2003-2016)’에 의거하고, 탈북인 조사는 김수암/김화순 외(2016)에 의거하여 필자가 재구성.

첫 번째 의견, 즉 “국가 지도자를 잘 따르는 국민”에 대해 탈북인은 찬

성이 36.6%이고 반대가 26.9%로, 찬성이 반대보다 10%포인트 가량 더 많다. 같은 질문을 남한인에게 던진 조사를 보면, 남한인은 찬성이 29.9% 정도이고, 반대가 절반(49.4%)에 달하여, 반대가 찬성보다 20.5% 가량 더 많다. 신민문화가 남한인에게서도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탈북인에게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의견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의견에 대해 탈북인은 찬성이 43.5%를 차지하고 반대는 23.8%에 불과하여 찬성이 반대보다 20.5% 가량 더 많다. 남한인의 경우 찬성이 35.1%, 반대가 43.7%로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더 많다. 여기서도 탈북인의 신민문화는 남한인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보면 탈북인들은 반정부적 촛불시위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뿐이고, 남한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지도자를 잘 따르는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신민문화’를 남한인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탈북인은 열 명중 네 명이지만 의외로 남한인 중에 ‘신민문화’의 가면을 쓴 사람도 열 명중 세 명이나 된다. 즉 남한인과 탈북인은 신민문화의 면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다만 탈북인이 더 강하게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탈북인의 극우적 정치행태는 북한사회에서 습득한 초기사회화인 ‘신민문화’의 필연적 효과이며, 남한 국가권력의 정치적 동원에 별다른 저항 없이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신민문화에 있어서 남한인과 탈북인 간 이질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동질적이다. 이는 분단체제하에서 신민문화가 남북한 주민 양자에게 배태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탈북인에게 국가권력의 동원이라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은 ‘친화성’을 가졌기에 ‘신민문화’ 가면은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계속 쓸 수 있었다.

3. 권위주의 문화가면

또 하나의 문화 가면은 ‘권위주의’이다. 탈북인은 일찍이 마르크스가 1877년 한 편지에서 말한 “일체의 인물숭배의 혐오”(Widerwillen gegen allen Personenkultus)와 “권위미신”(Autoritätsaberglauben)(Marx, 1877: 308)의 배척을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전태국, 1998: 33). 오래 동안 공산 독재 체제에서 베버가 말하는 “주술적 인간숭배의 궤도”(die Bahnen einer magischen Anthropologie)(Weber, 1915: 262)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전태국, 2013a: 37). 권위는 호르크하이머가 1936년에 발표한 ‘권위와 가족 연구’(Studien über Autorität und Familie)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간단히 “시인된 의존”(bejahte Abhängigkeit)(Horkheimer, 1936: 24)을 말한다. 여기서 시인의 근거는 자신의 의존과 복종을 정당하다고 믿는 권위주의 인성에 있다. 오늘날 경험적 연구에서 말해지는 ‘권위주의 인성’은 아도르노와 그의 동료들이 미국에서 1945~1946년에 실시한 조사연구를 아도르노가 미국망명을 끝내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 귀환한 후인 1950년에 출간한 저작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New York, 1950)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1)인습을 완고하게 고수하려는 인습주의(Conventionalism), (2)인습적 가치를 손상하는 사람들을 몰아 대고, 그들에게 화를 내고 비난하고 처벌하려는 권위주의적 공격심(Authoritarian Aggression), (3)자기 집단의 이상화된 권위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는 권위주의적 복종(Authoritarian Submission), (4)강력한 지도자와 동일시하고 힘과 강인함을 과시(Power and Toughness), (5)모든 인간적인 것에 대해 적대적이고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는 파괴성(Destructiveness and Cynicism), (6)무의식적인 감정적 충동을 외부세계에 투사하는 성향(Projectivity), (7)비밀스런 힘이 개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미신과 고정관념(Superstition and Stereotype), (8)주관적인 것, 상상력, 심미적인 것을 거부하는 반 내면성

(Anti-Intracception), (9)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집착(Sex) 등이 권위주의 인성의 전형으로 들어졌다(Adorno, 1950: 226).

오늘날 사회학에서 권위주의란 “상투적인 틀에 박힌, 편견에 의해 각 인된 비합리적 태도”를 가리킨다. 권위주의의 전형적인 성격특징은 (1) “가르치기 힘든 완고한 태도”, (2) “흑백 채색”의 색깔론 경향, (3) 사회적 환경을 “친구와 적”으로 난폭하게 구분, (4) 확고한 가치를 고수하는 “인습 주의”, (5) 전통적 가치를 손상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비난하고 처벌하려는 “공격성” 경향, (6) 다양성에 대한 “불관용”, (7) “강력한 지도자”와 동일시, (8) “단단함과 힘셈”의 강조, (9)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서 찾는 “투사” 등이다(Hartfiel/Hillmann, 1972: 57). 여기서 권위주의는 국가와 관련해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문화가면은 네 가지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에 의해 측정하였다. 아래 <표 3>은 김수암/김화순 외(2016)조사에서 권위주의 관련 질문에 대한 탈북인의 응답 결과이다.

- (1) “남한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는 의견에 찬성한 탈북인은 무려 62.1%에 달하고 반대는 15.1%에 불과했다. 같은 해에 동일한 의견을 남한인에게 물어 본 바에 의하면, 남한인은 찬성이 42.1%, 반대 36.6%이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자료집 2003-2016).
- (2) “사회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이 충분치 못하다면 비상조치라도 사용하여야 한다”에 대해 찬성한 탈북인은 무려 80%에 달하였다(대우동의 50.2%, 다소 동의 29.8%).
- (3)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엄격한 통제와 질서가 필요하다”에 대해서도 탈북인의 71% 이상이 동의하였다.
- (4) “위대한 지도자가 시대를 만든다”에 대해 탈북인의 73% 이상이 동의하였다.

위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탈북인 열 명중 여덟 명 가까이가 권위주의 경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남한인은 권위주의 문항 즉 강력한 법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항에 열 명 중 네 명(42.1%)이 찬성을 표하였다.

〈표 3〉 탈북인의 권위주의 경향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보통	별로 동의 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국민의 권리가 아닌 강력한 법질서가 남한 사회에 필요하다.	29.9	32.2	22.8	10.4	4.7
2. 사회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이 충분치 못하다면 비상조치라도 사용하여야 한다.	50.2	29.8	15.4	4.0	0.7
3.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엄격한 통제와 질서가 필요하다.	43.5	28.1	18.7	8.0	1.7
4. 위대한 지도자가 시대를 만든다.	49.3	23.8	16.2	5.7	5.0

출처: 김수암/김화순 외(2016)

탈북인의 강력한 권위주의 성향은 현인에(2013: 94)의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현인에에 의하면, “나라와 집단이 발전하려면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탈북인들은 강력한 동의(전적으로 동의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4로 보았을 때 평균 1.5)를 표하였고,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법이 충분치 못하다면 비상조치라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강력한 동의를 나타내었다(동의를 하는 정도가 최고 1, 최하 4인 조건에서 1.58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탈북인은 ‘권위주의’ 문화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시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남한사회의 민주적 정치문화에 적응하기 보다는 남한사회에 구시대의 유물로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 문화와 친화성을 가져, 북한 초기사회화에서 습득한 권위주의 문화가면을 방해받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탈북인의 이러한 강력한 ‘권위주의’ 문화가면이 태극기집회와 땀글알바에 아무런 저항감 없이 동원될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시에 남한사회의 새로운 시민 민주주의 환경에 탈북인들이 적응하는데 실패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4. 왜 북한 초기사회화의 효과가 남한사회화에 의해서도 사라지지 않는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되는 점은 북한에서 습득한 초기 정치사회화의 효과가 남한사회에 와서도 사라지거나 약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유지’는 상술한 현인애(2013)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탈북인이 북한에서 체득한 초기사회화 효과가 남한에 와서도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두 가지 점에서 발견한다. 하나는 탈북인들이 국가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탈북인의 높은 선거참가율이다. 탈북인의 정부 신뢰도는 최솟값 1점에서 최댓값 4점까지의 구간에서 3.05점, 법원 신뢰도는 2.94, 국회 신뢰도는 2.5로서,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국가 신뢰도(정부 신뢰도 2.4, 법원 신뢰도 2.71, 의회 신뢰도 2.08)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현인애는 지적한다(현인애 2013: 127). 한편 남한인의 정부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점은 국내외 자료에 의해 널리 증명된 사실이다. 2014년에 실시된 한국종합사회조사에 의하면 불신의 비율이 67.1%를 차지하고(전혀 믿지 않는다 19.3%, 별로 믿지 않는다 47.8%), 신뢰는 32.9%(매우 믿는다 1.3%, 약간 믿는다 31.6%)에 그쳤다. UNDP에 의하면, 한국의 중앙정부신뢰도는 2014~2015년에 28%이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27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탈북인들의 이러한 높은 국가 신뢰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현인애는 북한에서 주입받은 조국, 집단에 대한 의식이 대한민국으로 그 대상이 바뀔 뿐 이러한 인식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의견이다 (현인애 2013: 130).

기존의 인식들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탈북인의 높은 선거참가율이다. 2012년 4월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조사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선거참가율이 76%로 남한인의 54.2%보다 20% 더 높았는데, 현인애는 그 까닭을 북한에서 체득한 초기사회화의 효과 때문이라고 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은 선거에 참가하는 것을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이고 공민으로서 마땅한 의무라고 보는 북한의 논리를 남한에서도 바꾸지 않고, 다만 충성해야 할 국가를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을 뿐이(현인애 2013: 141).

그러나 기존의 인식들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현인애의 설명은 너무 단순하다. 남한사회의 영향력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초기 사회화의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남한사회에 구시대의 유물로 남아있는 문화가면 - '신민문화' 와 '권위주의 문화' - 과 '선택적 친화성'(Wahlverwandschaft)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선택적 친화성'은 막스 베버에서 유래하는 개념으로(Weber, 1904/05: 83), 한 편이 다른 한 편에 대해 인과적 우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특정한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서로 능동적 관계를 맺어, 서로 끌어당기고 상호 영향을 주고 상호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⁸⁾

8) 베버에 의하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현세 내적 금욕주의의 형태로서 양자 간에 '선택적 친화성'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와 관료제는 도구적으로 합리적인 사회조직의 두 가지 유형으로서 서로 '선택적 친화성'에 의해 결합된다. 베버는 '반영론'을 배척한다. "한 종교심의 특징은 그 종교심의 특징적인 담지자로서 등장한 특정 계층의 사회적 상태의 단순한 기능을 나타낸다는가, 오직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가 혹은 그 계층의 물

남한사회에도 구시대의 문화가면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남한인 열 명 중 신민문화의 가면을 쓴 사람이 세 명이고, 권위주의의 가면을 쓴 사람이 네 명에 이른다. 탈북인은 이들과 친화성을 가져 극우적 정치행태를 벌이고 댓글알바에 동원되는 데 아무런 저항감을 갖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⁹⁾ 그러나 ‘선택적 친화성’ 만으로는 우리들의 본질적 문제가 충분히 대답되지 않는다. 왜 북한 초기사회화의 효과가 남한사회화에 의해서도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들의 분석 시야를 이주자 정치사회화 이론에 향하게 한다.

5. 탈북인의 정치지향의 특징

첫째로, 2016년에 실시한 우리들의 조사와 한국종합사회조사에 의하면, 탈북인의 정치적 무력감은 남한인보다 훨씬 더 크다. 아래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 같은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말을 하

질적 또는 관념적 이해관계의 상태를 반영한다”(Weber, 1915: 240)고 보는 시각은 베버에 의하면 “시대에 뒤진 믿음”(veralteten Glauben)이다(Weber, Max, 1904: 166). Weber, Max, 1904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in: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9. Aufl., Tübingen: J.C.B.Mohr(Paul Siebeck) Verlag, 1988).

- ⁹⁾ 탈북인의 국정원 댓글 알바와 시위알바 현상, 2016년 겨울과 2017년 겨울 태극기집회 참여로 나타났던 극우행동대로서 보여주었던 탈북인의 반민주적인 혹은 비시민적인 정치행태는 북한 초기사회화의 필연적 결과이자 이들이 한국에 온 이후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환경적응에 실패한 증거로 해석되지만, 이들의 비시민적 행동을 촉발시킨 또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남한 정부가 이들에게 부여한 ‘신통일역군’의 역할이다. 탈북인의 비민주적 극우적 정치행태는 이 역할에 충실하게 부응한 ‘남한사회화’의 증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한정부가 그간 해왔던 탈북민 정책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정권 차원에서 이들에게 부여한 ‘신통일역군’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같은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착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는 것은 큰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탈북인은 62.2%인데 남한인은 2014년 KGSS조사에서 53.3%이었다. “정치는 너무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의견에 탈북인은 63%가 동의하였는데 비해 남한인은 2014년 KGSS조사에서 34.1%가 동의하였다. “공무원들은 나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에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탈북인은 66.3%가 동의하였는데 비해 남한인은 2014년 KGSS조사에서 59.2%가 동의하였다. 이처럼 북한인의 무력감이 남한인보다 더 크다.

〈표 4〉 정치적 무력감(효능감)

	탈북인	남한인	
	2016	2004	2014
1) 나 같은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은 큰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62.2% (37.1%)	59.9% (16.9%)	53.3% (18.8%)
2) 정치와 정부는 너무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들은 때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63.0% (37.0%)	49.0% (11.5%)	34.1% (19.1%)
3) 공무원들은 나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에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66.3% (32.7%)	63.9% (15.4%)	59.2% (14.7%)

비율은 정치적 무력감을 나타내며, 괄호안의 수치는 ‘동의하지 않음’(매우 동의하지 않음 + 다소 동의하지 않음)의 비율로서 효능감을 나타낸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질문이 약간 다르다.

“나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영향도 주기 어렵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정치나 행정에 대해 나보다 잘 알고 있다”

“정부는 나 같은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

자료: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자료집 2003-2016, 김수암/김화순 외(2016).

그러나 효능감을 무력감의 부정으로 이해할 때 탈북인의 정치적 효능감은 오히려 남한인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탈북인의 정치적 효능감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2.7%~37.1% 이상을 차지하는데 비해, 남한인의 경우는 11.5%~19.1%로 20%미만이다. 따라서 현인애의 주장

과는 달리, 탈북인의 무력감은 남한인보다 크지만 효능감도 남한인보다 더 높다. 이러한 우리의 발견은 현인애의 연구(2013)를 반박한다. 현인애에 의하면 탈북인의 정치적 효능감은 낮은 반면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 그녀의 조사에 의하면, “내가 남한 정부나 국회에 찾아가 건의해도 그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에 최소치 1과 최대치 4 사이의 동의점수에서 응답자들이 보인 점수는 1.88이었고, “나는 남한의 정치가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30이었다. 현인애는 이 점수에 의거하여 탈북인의 정치효능감이 매우 낮다고 보았다(현인애 2013: 91). 그러나 이는 잘못된 진단이다. 남한인과 비교하면, 탈북인의 정치적 효능감은 오히려 더 높다.

둘째로, 탈북인들은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탈북인 응답자의 투표율은 69.6%로서 남한인 투표율 58.0%에 비해 10%이상 높았다. 그리고 이 선거에 참여한 탈북인 응답자 중 새누리당 지지는 71.8%에 달했는데 비해 남한인은 33.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김수암/김화순, 2016). 탈북인은 남한인에 비해 높은 보수당 지지를 보인 것이다. 상술의 현인애의 연구에서도 탈북인의 보수당 지지가 높았다. 2012년 4월 조사된 176명의 선거참가자 중 보수당인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에 투표한 북한이탈주민은 154명으로 87.2%를 차지하였다. 남한인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을 지지한 비율이 55%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탈북인들의 보수당 지지가 두드러지게 높았다(현인애 2013).

한편 청소년의 경우에, 탈북청소년은 남한 청소년과는 달리 정치적 효능감고 높고 정치적 신뢰도도 높다는 점이 조사에서 나타났다.

박정서(2011)에는 의하면, 정치효능감을 측정하는 질문 “정치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인식”함에서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사이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건의하면 정치인이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믿음”에서는 큰 차이가 났다. 탈북청소년은 3.23, 남한 청소년은 2.37이었다. 정치

신뢰감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점수가 남한 청소년보다 월등히 높았다.

〈표 5〉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정치신뢰감과 정치효능감

구분	내용	탈북 청소년 (173명)	남한 청소년 (180명)
		평균 점수	평균 점수
정치 신뢰감	1)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정부의 능력	3.51	2.51
	2) 정부가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	3.39	2.46
	3)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함	3.32	2.49
정치 효능감	1) 정치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인식	3.17	3.12
	2) 건의하면 정치인이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믿음	3.23	2.37

출처: 박정서(2011)

여기서 억압정치의 경험을 가진 이주민이 새로운 호스트 이주 국가에서 얼마나 정치참여에 적극적인가는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오랜 정치적 억압의 역사를 가진 체제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은 정치체계에 불신적일 수 있고, 따라서 선거에 투표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그 반대로 그들은 경쟁 후보자들 중에서 선택하는 자유를 즐기고 따라서 투표할 확률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 포르테스/모초(Portes and Mozo, 1985)는 미국 마이애미 선거구(precinct)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공산국가 쿠바에서 온 이민자와 멕시코인 이민자들에게서 이전의 정치적 경험이 미국 이민 후 투표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공산 쿠바 출신 이민자들이 히스페닉 집단들보다 투표참가율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르비츠/가르시아(Arbizu/Garcia, 1996)도 쿠바계 이민자들이 멕시코계 이민자들보다 투표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반해 콜렛(Christian Collet, 2000)은 공산주의로부터 탈출한 베트남계 이민자 집단들에게서는 정치체계에 대해 불신이 강해 정치참

여율이 낮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라마크리시난/에스펜셰이드(Ramakrishnan/Espenshade, 2001)는 이전의 억압정치 경험이 투표참여에 일관된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인구조사(CPS) 1994년, 1996년, 1998년 자료를 이용하여 백인, 흑인, 아시아계, 라틴계 이민자들의 투표참여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각 선거 해에서 1세대 표본의 경우, 공산주의 국가나 억압적 국가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민주국가에서 이민 온 사람들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갖지 않았고, 또한 부모가 억압적 체제에서 이민 온 2세대 시민들은 부모가 민주국가에서 이민 온 사람들보다 투표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았다. “1세대와 2세대의 쿠바계 이민자들의 높은 투표참가 수준은 다른 억압적 국가 출신의 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Ramakrishnan/Espenshade, 2001: 895)고 분석하였다.

억압적 정치체제로부터 도망하여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은 남한인과 비교해 투표참가율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는가? 통일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16년 4월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탈북인 응답자의 69.6%가 투표에 참가하였는데, 이는 당시 남한인 투표율이 58%였던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투표율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투표율이 본래부터 낮은 것은 아니었다. 1985년 2월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참여율이 84.6%에 달했다 그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8년 제13대는 75.8%, 1992 제14대는 71.9%로 하락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 와서는 투표참여율이 대폭 낮아졌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60.6%, 2008년 제18대는 46.1%로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중 가장 낮았다. 이후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12년 제19대는 54.2%, 2016년에는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58%로 올라갔다. 따라서 탈북인의 선거참여율이 본래 한국인보다 높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Ⅲ. 이주자 정치사회화 이론에 비추어 본 탈북인 정치참여 행위

이제 우리의 분석시야는 이주자 정치사회화 이론에 향한다. 이주자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설명인 저항이론, 노출이론, 전이이론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검토를 통해 탈북인들의 정치참여 중에서 왜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지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간의 탈북인의 정치사회화와 정치행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주민의 정치사회화에 대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제출한 것은 화이트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White et al, 2008)이다. 그들은 원주민의 조사연구에 뿌리를 둔 정치사회화 이론의 세 가지 모델, 즉 저항(resistance), 노출(exposure), 전이(transferability)의 모델들을 이민자의 정치사회화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모델들 간의 상이는 초기 청소년기에 학습한 핵심적인 정치적 성향이 새로운 호스트 환경에서 어느 정도로 변화하는가에 집중한다. “정치사회화 이론들은 이민자의 정치적 재사회화의 잠재력에 관해 상이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민 이전에 가졌던 신념과 행동이 변화에 저항적일 수 있고, 새로운 정치체계에 노출이 적응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혹은 이민자는 신념과 행위를 한 정치체계로부터 다른 정치체계에 전이하는 방도를 발견할 수 있다.”(White et al, 2008: 268) 화이트는 이 세 가지 재사회화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 ‘전이’와 ‘노출’이론은 지지되며, 이민 이전의 신념과 행동이 변화에 ‘저항적’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였다.”(White et al, 2008: 268).

1. 저항이론(Resistance Theory)의 접근

이민자의 적응은 고전적인 정치사회화 이론에 입각해서 보면 전망이 비관적이다. 정치적 성향은 형성기 동안에 획득되고 형성기가 끝나면 안정화되어 변화에 저항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주 이전에 가졌던 신념과 행동이 변화에 저항적이라고 보는 저항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정치적 성향은 일찍이 성인 이전(pre-adult)의 생활에서 발전하며, 이러한 형성기가 지나면, 정치적 관심과 습관의 변화는 일어날 가망이 없다. (Hyman 1959; Hess & Torney 1967; Easton & Dennis 1969; Merelman 1986; Sears & Funk 1999). 정치적 성향은 유년과 청소년기 동안에 가족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회화에 의해 형성, 발생한다. 미시적 수준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거시적 수준의 정치문화의 양 요인이 이 과정을 형성한다. 형성기 동안에 획득한 지향과 일치하지 않은 환경 메시지는 회피하거나 거절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민자들은 새로운 정치체계에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민자의 정치지향은 자신의 출신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수록 변화에 저항적일 것이라 기대된다(White et al, 2008: 270). 이주 이전과 이후의 정치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의 학습이 새로운 정치규범의 내면화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재사회화는 쉽지 않다. 간단히 말해서 저항 이론은 이전의 태도, 관행, 가치, 지향이 계속 남아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저항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83: 238)가 말하는 “아비투스(習性)의 이력 효과”(Hysteresis-Effekt des Habitus)를 가리킨다. 탈북인들은 전근대적 신민 의식에 젖어 있으면서 남한의 첨단적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비동시성이 그들의 삶이 특징이 된다. 만하임(Karl Mannheim, 1958: 48)이 말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temporary)”이다.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특징이 공존한다.

그러나, 외국의 경험적 증거들은 저항이론을 반박한다. 정치사회화가 성인기에서 잘 일어난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Jennings & Niemi 1968; Converse 1969, 1976; Milbrath and Goel 1977; Cook 1985; Teixeira 1987; Rosenstone and Hansen 1993; Niemi and Hepburn 1995; White et al. 2008). 2002년부터 2010년까지 European Social Survey (ESS)의 자료에 기초하여 16개국을 비교한 Tijana Prokic-Breuer(2012)의 연구에 의하면, 이민자의 정치참여는 도착지 호스트 국가에서 더 오래 거주한 이주민에게서 더 높다. 이 점은 인습적 참여(정치가나 정부관료와 접촉, 정당이나 행동그룹에서 활동, 기타 조직이나 단체에서 활동, 정당의 당원)와 비인습적 참여(캠페인 배지를 달거나 과시, 청원서에 서명, 합법적 대중시위에 참여, 특정 생산물의 거부)의 두 가지 참여 형태에 다 해당하며, 저항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 즉 이주자의 정치적 행동주의는 호스트 국가에서의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배척한다.

탈북인의 초기 사회화를 규정하였던 북한의 정치문화는 다음과 같이 특징지워질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남북한에 들어선 근대국가는 전승된 봉건적 “신민문화”(Untertanenkultur)를 파괴하였지만, 북에서는 ‘공산주의적’ 신민문화에 의해, 남에서는 ‘권위주의적’ 신민문화에 의해 대체되었다. 신민들에게는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이 승인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직하고 정치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요구를 제기하지 못했다. 국민의 정신생활을 통제하는 각종 제도들이 고안되었고, 검열과 일체의 정보 흐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실시되었다. 뒤쫓기, 구금, 숙청은 북한에서 오늘날까지도 유지되는 정치의 도구이다. 신민문화는 오랜 권위주의의 산물이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주민은 정치에 대해 전혀 이해(理解)를 갖지 못하거나 오직 수동적 이해만을 가졌다. 자신의 “세계”의 중심에는 가족, 촌락, 정치종교(예: 주체사상, 반공주의)가 위치하고 있다. 주민은 자신을 정치적 객체, 신민으로 이해한다.

남북한이 공통분모로서 “신민문화(Untertanenkultur)”를 가지고 있었지만, 남한에서는 민주화의 성취와 함께 신민문화는 본질적으로 극복되었고, 이 극복은 최근의 촛불집회에서 단적으로 표현되었다. 이에 반해 북한에서는 신민문화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북한은 오랜 대중동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식량난이후에는 더욱 과제해결차원에서 주민동원을 활발하게 해왔다. 북한주민들 중 상당수가 배급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집단적 생산 노동에 꾸준하게 참여해왔는데, 주민들은 “국가가 나에게 생존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배급을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생산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탈북인, 2014년 탈북, 기술자, 2017년 1월 3일 면접). 국가에게 순절과 충성을 다하는 북한주민의 신민적 정치의식은 남한에 온 뒤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탈북인과 그의 인터뷰는 이러한 신민적 의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나는 이 한국이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야비하달까... 고거 남은 기일 얼마 안되는 걸 박근혜라는 여자가 나쁘긴 나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원순데.” (2017.4.15. 필자인터뷰, 탈북인, 50대 남성, 당세포 비서 출신, 현재 생산직 노동자)

위의 50대 남성 탈북인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나쁘기는 나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기한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쫓는 남한주민의 태도를 야비하다고 느낀다. 이런 감성의 근저에는 국민으로서 최고 권력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신민적 윤리가 존재한다.

“북한은 대통령이 한번 되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북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처럼 모시잖아요. 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요만큼도 할 수 없고 요만큼만 하면 죽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대

통령이 수령이랑 같은데 그 사람을 떠받들진 못할망정 사람들이 막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도 한 나라 대통령인데 왜 대통령 비방하고 무시하고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2017년 6.21. 필자 인터뷰, 40대 여성, 2006년 탈북).

생애 초기에 형성된 정치적 태도인 신민(臣民)적 태도는 이주 이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현하면서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고 제약한다. 이런 점에서 저항 이론(Resistance Theory)은 탈북인들이 북한에서 신민으로 살다가 남한으로 와서 다시 신민으로 살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국가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국가 없으면 개인도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내 용에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하고 현재 신세대 사람들 비교해볼 때 참 많이 차이가 있어요.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할 때 국가라는 존재는 잊히거나 하나 생각하면 되냐, 과연 애국심 교육을 무시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사례 35, 여자, 48살, 2008년 입국, 현인에. 2013 인용)

탈북인들은 독재국가를 탈출하여 남한에 왔지만, 그들의 이전의 심성과 태도, 즉 수십 년간 독재체제에서 관습화된 사고 모형과 행동방식은 국경을 넘어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철폐되지 않는다. 더욱이 탈북인들은 남한 국민들과 거의 접촉 없이 분리되어 살고 있다. 탈북인과 친구로 지내거나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남한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남한 국민들은 탈북인에 대해 친근하게 느끼기 보다는 멀게 느끼고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혹은 멀게 느껴지십니까?”라는 질문에 ‘멀게 느껴진다’는 응답이 2011년 조사 이래 줄곧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거리감은 가족관계 맺는 것에 대한 거부에서도 표현된다. 2010년 조사에서 “북한이탈부민이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응답자의 60.7%가 반대했다(한국종합사회조

사 누적자료집 2003-2016).

이러한 분리된 삶과 거리감으로 인해 탈북인들의 이전의 신민문화는 남한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온존한다. 하나원을 비롯한 국가 기관이 탈북인들을 ‘교육’시키고 있지만, 탈북인들은 시민으로 ‘개선’되기 보다는 신민적 속성을 그대로 간직한다.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탈북인들은 비운의 대통령이라고 깊이 동정한다. 만약 청와대나 국정원으로부터 집회 참가 지시를 받았을 때 탈북인 누가 감히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교육’은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89)가 『우상의 황혼』에서 말하는 “길들이기”와 ‘사육’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만약 저항이론이 타당하다면, 이주민의 정치참여 수준은 출신국에서의 정치 학습에 의해 조건지워질 것이다. 한국사회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 사회적 추락, 인정 결여, 자부심 손상 등의 경험에 기초하여 탈북인들은 남한사회에 대항하는 ‘저항적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전태국, 2013: 86). 이주하기 전의 경험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환경에서 재사회화는 어렵다. 성인 시기에 호스트 사회에서 새로운 패턴의 정치행위를 형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따라서 이주민들에게서 보이는 변이는 단지 그들의 개인적 사회경제적 특성과 그들의 출신국의 정치문화에 의해서만 조건지워질 뿐이다. 초기 정치사회화에서 습득한 정치적 정향이나 태도가 이후의 변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남한의 새로운 정치환경에 노출되는 기간은 남한에서의 정치참여의 수준과 어떤 유의미한 관계가 없을 것이다. 탈북인들은 북한에서 형성한 이전의 인식의 틀을 남한에 와서도 고수할 것이다. 이주 이후의 남한 거주기간이나 정치사회화는 탈북인들의 정치참여의 수준이나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동의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현인애(2013)의 연구는 북한에서 형성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대한민국으로 그 대상이 바뀔 뿐, 북

한에서 형성된 사고의 틀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면 저항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탈북인의 관제시위참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탈북인들은 과거 북한에서 국가의 동원령에 강제로 응하도록 사회화 되었는데, 만약, 이런 특성은 남한에서도 지속되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동원이 지시되면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남한에서 집회 시위에 동원을 하도록 국가권력기관에서 지시를 했을 때는 거절하기 힘들며 북한에서 청소년기와 아동기에 이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저항이론에 비추어 볼 때 청장년 이상 탈북고령자들이 국가권력의 동원 요구에 더 잘 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과거 북한에서 당 생활이나 당정치교육을 많이 받은 탈북인들은 국가권력의 동원 요구에 더 잘 응할 것이다. 반면, 탈북청소년이나 청년층은 국가권력의 정치적 동원요구에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같은 저항이론의 관점은 태극기집회에 왜 탈북고령층이 주로 참여했는지 선거 시에도 고령자층을 포함한 탈북인 집단이 집권여당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2. 노출이론(Exposure Theory)적 접근

노출이론(the theory of exposure)은 이주민의 적응은 새로운 정치환경 노출에 크게 의존한다고 가정한다(Wong 2000; Ramakrishnan and Espenshade 2001). 호스트 국가에서의 거주기간이 열쇠 변수이다. 정치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이전의 초기사회화이기 보다는 호스트 국가에서 획득한 경험이라고 본다. 노출이론과 저항이론의 대립은 초기경험 대 후기경험(early-life versus later-life experiences)의 상대적 중요성과 지속성에 대한 경험적 논쟁으로 표출된다. 저항이론은 사회화의 일차적 에이전트의 역

할과 출신국의 정치문화를 강조한다. 이에 비해 노출이론은 성인 정치학습의 역할을 강조한다. 노출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지역사회에 편입, 정치참여를 격려하거나 위축시키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 등에 대한 최근의 혹은 동시대의 경험이 이주민 정치참여의 핵심적 결정인자이다. 새로이 갓 도착한 이주자들은 언어장벽, 문화장벽, 그들의 정치지향 때문에 참여할 가망이 별로 없다. 그들의 정치지향은 출신국의 정치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호스트 국가에 도착하면, 이민자는 거의 백지상태(*tabula rasa*)로 간주된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이다. 이민자가 새로운 호스트 국가의 정치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의 길이에 좌우된다. 정치참여에서 보여지는 애초의 차질은 시간이 지나면 약화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사회적 연결이 증가하고, 호스트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커지고,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익숙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선거참여와 당파성(*partisanship*)이 이주자들에게서 거주기간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Cain et al. 1991; Arvizu and Garcia 1996; Wong 2000; Ramakrishnan and Espenshade 2001). 왕(Janelle S. Wong, 2000)은 미국의 최대의 이주자 집단인 아시아계 미국인(Asian Americans)과 라틴계 사람들(Latinos)에게서 당파성(*partisanship*)의 발전을 조사하였다. “이주자가 미국에 살았던 기간과 당파성(*partisanship*)의 획득 간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발견된다. 귀화, 영어구사력의 획득, 미디어 사용도 이주자의 당파성 획득에 기여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정치체제에 대한 노출을 통한 강화(*reinforcement*) 과정이 다양한 이주자 집단을 가로지르는 정치적 태도의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본 연구는 보여준다.” (Wong, Janelle S. 2000: 341).

라마크리시난/에펜셰이드(Ramakrishnan/Espenshade, 2001)는 미국의 인구조사(CPS: Current Population Survey) 1994년, 1996년, 1998년 자료를 이용

하여 백인, 흑인, 아시아계, 라틴계 이민자들의 투표참여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미국거주기간이 외국출생자들에게 미국 정치제도에 통합되는(incorporated) 정도를 나타내는 한 중요한 지표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Ramakrishnan/Espenshade, 2001: 876). 그리고 모든 인종집단에게서 세대별로 투표 확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2세대 백인은 3세대 이상의 다세대 백인보다 투표할 확률이 22-34% 더 많으며, 장기거주 이민자보다 30-40% 더 많았다(Ramakrishnan/Espenshade, 2001: 885). 흑인의 경우에는 1세대에서 다세대로 단계별로 투표참가가 증가하였으며, 유사한 직선 패턴이 아시아계에게서 발견되었다. 특히 아시아계의 경우에는 이민자 세대에 따라 투표참여의 진보적 증가가 나타나 3세대 이상에게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는 달리 라틴계의 경우에는 최고의 투표참가 확률은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1세대 시민에게서 나타났고, 2세대 라틴계에게서 참가확률이 감소하였고, 3세대이상에게서는 더욱 낮아졌다. 그리하여 “직선적” 동화주의 이론(“straight-line” assimilationist theories)은 맞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Ramakrishnan/Espenshade, 2001: 888)

프로키츠-브로이어(Tijana Prokic-Breuer, 2012)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의 자료에 기초하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16개국에서 원주민과 1세대 이주민 간의 정치참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는 노출이론에서 도출된 가설, 즉 이주민의 정치적 행동주의는 시간이 지나면 원주민의 행위와 닮아가게 변화할 것이라는 가설의 강력한 지지를 발견한다.

첫째로, 인습적 참여의 경우, 원주민과 이주자 간의 갭은 초기단계(거주기간 5년 이하)에서는 62%였는데, 후에는 35%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비인습적 참여의 수준은 원주민과 목적지 국가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이주자 간에는 거의 수렴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 기간은 정치참여와 유

의미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비인습적 참여의 경우 가장 강력하다.

둘째로, 인습적 참여의 경우 노출이론의 강력한지지가 발견된다. 인습적 정치참여는 새로운 정치환경의 맥락에 의존하며, 출신국 보다 호스트 국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민주국가 출신 이주자와 비민주국가 출신 이주자 간에 어떤 차이도 발견되지 않는다. 인습적 참여에서는 노출이론을 위해서만 증거가 발견된다. 원주민의 정치참여 수준과 이주민의 정치참여의 수준 간에 강력한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관찰된다. 이를테면 원주민의 인습적 정치참여에서 1%의 증가는 이주자가 정치참여할 가능성을 4% 증가시킨다. 이주자들 사이에 참여의 차이는 주로 호스트 국가에서 보낸 시간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므로 ‘저항’ 가설은 배척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초기 정치적 타성(initial political inertia)은 새로운 정치환경에서 재사회화를 통해 점차로 극복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주자와 원주민 간에 정치활동 수준의 점차적 수렴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인습적 정치참여의 경우에 호스트 국가에서의 정치사회화가 이주자의 정치적 행동주의를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효율적인 정부와 높은 수준의 원주민 정치참여를 가진 나라에서는 이주자의 정치참여율이 더 높다. 이것은 노출 이론의 강력한 지지를 말한다. 즉 호스트 국가에서의 정치적 맥락과 사회화가 이주자의 인습적 행동주의의 수준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요컨대, 노출이론의 핵심은 이주자들이 새로운 정치적 환경에서 오래 노출될수록 더 많이 적응한다는 것이다. 박정서의 경험적 연구는 노출이론을 지지한다(박정서, 2011: 111). 국내의 탈북이주자에 대한 연구에서도 노출이론을 지지하는 연구가 있다. 박정서(2011)의 연구에 의하면, 탈북청소년의 정치신뢰감과 정치적 효능감에 남한 거주기간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남한 거주기간이 1년 길어질 때 정치

적 신뢰감은 평균적으로 .238 점 낮아지며 주관적 계층의식이 1단위 낮아질수록 정치신뢰감은 .202점 높아졌다. 정치적 효능감에도 정치사회화 경험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화 접촉빈도가 1단위 높아질수록 정치효능감은 .189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박정서, 2011: 97).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정치적 신뢰감은 낮아지고, 정치사회화 접촉빈도가 증가할수록 정치적 효능감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남한에서 정치사회화경험이 축적되고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탈북청소년들은 남한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나 신뢰감은 낮아져(박정서, 2011:116), 남한청소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탈북청소년의 동화현상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출이론을 지지한다. 즉 이들의 정치적 태도형성에 북한 초기 정치사회화의 영향보다 남한 재사회화의 영향이 더 강력하다는 노출이론의 주장이 지지된다. 이러한 탈북청소년의 정치적 태도의 변화는 그들의 복합적인 경험, 즉 북한우상화 교육의 수용과 이중의식, 남북한 양 체제 경험이 낳은 비교의식, 남한사회에 대한 기대와 실망과 같은 복합적인 경험이 반영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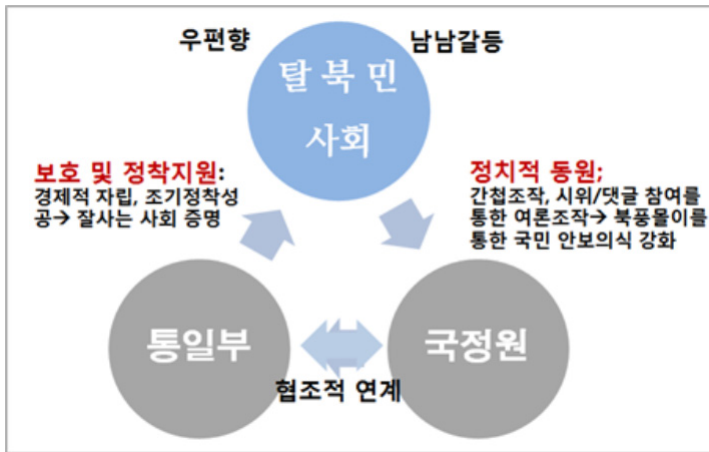
그러나 상기의 두 가지 탈북인 연구는 일치하지 않는다. 박정서의 탈북청소년 연구는 노출이론을 지지하고, 현인애의 탈북성인 연구는 저항이론을 지지한다. 세대별로 이론의 타당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분석의 불충분성을 말한다.

여기서, 탈북인들이 남한에 이주한 이후 탈북인 사회가 어떤 정치적 환경에 노출되었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노출은 ‘만남을 거듭할수록 호감을 가지며, 정책을 대중에게 자주 알리고 노출시킴으로써 대중을 설득한다’고 하는 로버트 자이언스(Robert Zajonc, 1968)의 ‘단순노출효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클라퍼(Joseph T. Klapper, 1960)의 선택적 노출이론(selective exposure theory)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의 기존의 견해를 강화하는 정보는 애호하고, 모순적인 정보는 외면, 회피하는 경향을 갖는다. 노출된 정보의 특정 측면을 선택하며, 이 선택은 전망, 신념, 결정 등에 기초하여 내려진다. 매스미디어와의 관계에서도 청중은 미디어의 정치적 상업적 프로파간다의 수동적 과녁이 아니다. 개인은 종전에 가졌던 확신을 지지하는 매스미디어 메시지에 강하게 끌린다. 미디어는 이전의 확신을 강화시킨다. 개인들은 이러한 내적 여과에 기초하여 매스미디어 메시지를 수용 혹은 거부한다.

노출이론에 근거하여 보면, 탈북인의 관제시위 참여는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의 국가권력은 북한에서 탈북한 이들에게 공식적으로는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비공식적으로는 정치적 동원을 요구했다.

〈그림 1〉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 탈북인 사회를 둘러싼 정치지형



통일부는 일차적으로는 탈북인에게 남한주민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입국이후 초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하여 보호하였으며 이때 남한주민에게 주는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생계급여를 주었다거나, 35세 미만에게 대학 특례입학의 기회를 주고, 무상으로 대학교육을 제공하였다. 탈북인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주었던 이유는 그들이 한국에 조기정착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가 탈북인의 정착성공에 대해 거는 기대가 컸던 근본적인 이유는 탈북인집단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체제경쟁의 승리의 증거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탈북인들은 경찰이나 국정원 등 안보관련 부처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왔다. 모든 탈북인들은 신변보호담당관(경찰)들의 관리에 놓여 일상적으로 그들과 접촉해야 했다. 특히, 탈북단체의 임원들은 국정원과 자주 접촉하였다. 이같은 안보관련 요원들과의 잦은 접촉과 노출을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 한 탈북청년단체의 임원은 한국에서 초기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서 남한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말 남북한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2017. 5. 3. 필자 인터뷰. 30대 대졸출신 탈북청년). 마치 남한의 국정원은 북한 보위부인 듯하고, 남한 경찰관은 북한 보안원처럼 탈북인들을 둘러싼다. 이것은 선택적 노출이론이 탈북인 사회에 적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문제는 북한에서 일반백성이었던 탈북인들조차 이러한 신변보호담당관(경찰)들의 관리(혹은 보호)가 한국에 온 지 십 년 아니 그 이상이 지나도 끝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에 있다(2017. 6. 21. 필자인터뷰. 40대 탈북여성).

탈북인이 집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지형은 국가권력의 보호와 동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비동시적인’ 정치문화를 구성한다. 한편에서는 국정원의 민간 감시,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국가주의, 권위주의의 복종을 미덕으로 강조하는 권위주의, 학연과 지연을 중시하는 연고주의가 한국 정치문화의 전근대적 축을 이루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의 인권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민민주주의, 사회지도층을 비리와 부패의 담지자로 보고, 정치가와 정당을 불신의 눈으로 보

는 대중의 깨어있는 차가운 시선이 한국의 정치문화의 근대적 축을 이루고 있다.

전근대적인 축과 근대적 축이 동시에 공존하는 한국의 정치문화 속에서 탈북인들은 유독 구시대적인 것에만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국정원 합동보호센터(대성공사)부터 하나원,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입국이후 초기 1년간 집중적으로 국가보호시설에 노출된다. 보호기간 동안 탈북인 사회는 일반 시민사회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분리되고 고립되어진다. 한국사회에 들어온 이후에도 탈북민 독자적인 맞춤형 정착지원체계라는 명분으로 ‘하나원-하나센터-탈북민사회’로 이어지는 고립된 섬을 형성한다. 입국직후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질 경우 한국사회에 들어와 시간이 경과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경로적 의존성에 의해 그들만의 세계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거주기간 변수의 정착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시민사회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대학사회에 들어간 탈북인들은 단지 인적자본의 효과만 얻는 게 아니라 한국사회에 깊이 들어가 사회적 연결망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한 사회적 자본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이이론(The theory of transferability)의 접근

전이이론은 저항이론과 노출이론의 중간에 위치하며,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의 요소를 가정한다. 초기 사회화를 통해 획득한 행동특징들이 후기 재사회화에 적응할 수 있다. 초점은 이민자의 생활경험의 연속성에 놓여진다. 적응은 출신국에서 초기사회화가 호스트 국가에서의 재사회화와 얼마나 상이한가에 의해 조건지워진다. 한 맥락에서 다른 맥락으로 이동은 저항이론이나 노출이론이 함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다. 이주자는 이주 이전의 출신국에서 습득한 정치적 기술과 지식

을 새로운 호스트 국가로 이전하고 새로운 나라에서 자신의 정치적 경험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망에서 보면, 정치적 지식의 ‘번역’(translation)은 출신국과 호스트 국가의 정치적 환경이 유사할 때 수월하다. 이에 반해 이주하기 전에 권위주의 출신국에서 많은 해를 보낸 이주자는 비록 많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호스트 국가의 민주주의 사회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Bilodeau et al. 2010). 비민주 국가에서의 초기사회화가 민주주의 원리를 배우는 능력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스트 사회에서의 정치적 참여는 이주민에게 상당한 량의 새로운 학습을 요구한다(Black 1987: 753). 환언하면, 이주 이전의 경험이 정치적 행위를 조건 짓지만, 그러나 재사회화를 방해하지 않는다.

북미와 유럽에서 나온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전이 이론을 지지한다. 소득, 교육, 거주기간, 연령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된 후에도 출신국이 정치적 통합(political incorporation)의 한 중요한 결정인자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다(Just and Anderson 2012; Bueker 2005; Sierra and DeSipio 2000; Alba and Nee 1999; Portes and Rumbaut 1996; DeSipio 1996). 이 연구들은 출신국이 이주자의 이전의 정치적 지식과 경험의 대리인(proxy)이며, 그리고 정치적 통합에 직접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주장한다.

가장 통찰력 있는 경험연구는 빌로도우와 그의 동료의 연구(Bilodeau et al, 2010)이다. 빌로도우는 2004년 호주선거 연구(2004 AES: Australian Election Study)와 2005년 세계가치관조사(2005 WVS: World Values Survey)의 호주 부문 자료를 이용하여, 권위주의 체제를 떠나 호주에 정착한 이민자들이 얼마나 민주주의 지지로 이행하는가, 선거활동에 참여하는가, 이민 이전의 권위주의 경험이 민주주의에 적응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로, 권위주의를 경험한 이민자들에게서 비민주적 체제에 대한 지

지가 나머지 구성원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다. AES 자료에서 보면, “강력한 지도자” 체제(“strong leader” regime)에 대한 지지가 호주 태생의 응답자는 18%, 민주주의 체제에서 온 이민자는 19%였는데, 권위주의 체제에서 온 이민자들은 40%가 지지하였다. WVS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호주 출신 응답자와 민주주의 국가 출신 이민자는 20%가 지지하였는데, 권위주의 체제 출신 이민자의 지지는 40%에 달하였다. 그리고 비민주적 정치 체제의 또 하나의 유형인 “군부 통치”(army rule)에 대해서도 권위주의 체제에서 온 이민자들의 지지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AES 자료에 따르면, 호주 태생 응답자의 5%, 민주국가 출신 이민자의 2%만이 “군부 통치”를 지지하였는데, 권위주의 체제 출신 이민자들은 17%가 지지하였다. WVS의 자료도 마찬가지였다. 호주 태생 응답자와 민주주의 국가 출신 이민자 모두 “군부 통치” 지지가 6%인데 비해 권위주의 체제에서 온 이민자들은 13%로 두 배 이상 높았다(Bilodeau et al, 2010: 148).

둘째로, 이민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 경험이 오히려 선거 활동에 참여를 격려한다는 점이다. 권위주의 출신 이민자들이 호주 태생 인구 또는 민주주의 국가 출신 이민자에 비해 선거 활동 참여가 훨씬 더 많았다(Bilodeau et al, 2010: 151). 선거 캠페인 중 지인들과 ‘투표 의사를 논의’한 사람은 호주 태생 인구는 31%, 민주주의 국가 출신 이민자는 32%였는데 비해, 권위주의 체제 출신 이민자의 경우 이 비율은 54%로 올라갔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일’한 사람은 민주주의에서 사회화된 두 그룹의 경우 15%였는데 비해, 권위주의 체제 출신 이민자들의 경우 그 비율이 28%로 거의 두 배나 높았다. ‘정치적 모임에 참석’과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돈 기부’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다. 권위주의 체제 출신 이민자는 인구의 나머지 부분에 비해 약 두 배나 더 많았다.

그리하여 Bilodeau et al(2010)는 권위주의 체제를 떠나 호주에 정착한

이민자들의 정치관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호주로 이주하기 전에 이민자들이 축적한 경험의 포트폴리오가 출신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 체계에 살아도 오랫동안 그들의 정치관을 각인하며, 출신국에서의 정치 관행이 더욱 권위주의적일수록, 그들의 민주주의 지지는 더 약해진다(Bilodeau et al, 2010: 154). (2)그러나 이민 이전의 권위주의 경험이 강력하게 지속되어 민주주의 적응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민자의 정치적 학습은 그들이 출신국을 떠날 때 멈추는 것이 아니다. 선거와 같은 정치 활동에 광범위한 참여는 이민자의 정치 사회화에서 변화와 새로운 학습을 시사한다. (3)정치 사회화는 학습 경험의 새로운 “층”(layers)이 이전의 “층”에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과정이며, 개인의 시각은 예전의 경험의 “층”과 새로운 경험의 “층”의 반영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온 이민자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선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의 “층”을 반영하는 반면, 권위주의적 대안의 지지는 예전의 권위주의 “층”을 반영한다. 이 두 개의 “층”이 동시에 이민자의 정치관에 영향을 미친다(Bilodeau et al, 2010: 156).

이러한 빌로도우와 그의 동료의 연구는 탈북인의 정치행태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탈북인의 권위주의적 지향과 높은 투표율은 권위주의 체제를 떠나 호주에 정착한 이민자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블랙(Jerome H. Black, 1987)은 전이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주장을 편다. 그는 캐나다에 거주한 지 5년 이하의 다양한 인종출신(영국인, 서인도인, 남유럽인과 동유럽인)에 대해 1983년 토론토 지역에서 실시한 한 조사를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이주자의 이전의 정치적 경험과 캐나다에 이주한 이후의 캐나다 정치에 참여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주자들은 과거의 정치적 경험을 ‘전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으며, 또한 출신국의 정치체계가 캐나다 체제와 유사한 사람

들, 즉 영국인만이 전이를 성취할 수 있다는 가설도 지지되지 않았다. 그의 연구는 출신국의 정치체제와 관계없이 전이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지지하였다(Jerome H. Black, 1987: 731).

저스트/앤더슨(Just/Anderson, 2012)은 2002-2003년에 19개 유럽 민주주의에서 수집된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외국출생(being foreign-born)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시민권(citizenship)이 정치참여를 높이고 정치참여에 불리한 사회화 경험들을 극복하도록 돕는 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비민주적 국가에서 사회화된 개인들에게 시민권은 비제도화된 정치적 행동(uninstitutionalized political action)의 강력한 결정인자이다”는 점이 확인되었다(Just/Anderson, 2012: 141).

또 하나의 통찰력있는 경험적 연구는 전술한 프로키츠-브로이어(Tijana Prokic-Breuer, 2012)이다. 프로키츠-브로이어는 전이이론이 ‘비인습적’ 정치참여에서 강력하게 지지된다는 점을 발견한다. 그에 의하면, ‘비인습적’ 참여는 비민주국가 출신 이민자보다 민주국가 출신 이주자에게서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일어난다. 출신국에서의 민주적 사회화가 참여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오직 ‘비인습적’ 정치참여의 경우만이다. 비록 일반적으로 행동주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지만, 부분적 민주국가 혹은 독재국가 출신 이민자의 참여는 민주국가 출신 이민자에 비해 느리게 진행된다. 그들은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이든 10년 미만이든, 20년 미만이든, 어떤 거주기간에서도 ‘캠페인 배지 달기’, ‘청원 서명’, ‘합법적 시위에 참가’, ‘제품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민주국가 출신의 이민자에 비해 적었다. 5년 이하의 초기이민단계를 제외하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출신 이민자는 그러한 ‘비인습적’ 정치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20% 더 높았다. 20년 거주 후에 그들의 참여수준은 원주민의 그것과 완전히 수렴하여, 민주적 국가 출신 이민자와 원주민 간에 차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비인습적’ 참여의 경우, 전이 이론은 강력하게 지지된다. 이

는 초기 정치사회화 경험이 정당이나 이해결사체에 관계된 활동 보다는 시위참여나 보이콧과 같은 ‘비인습적’ 활동의 참여에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이민자와 원주민 간에 ‘비인습적’ 정치참여의 수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주민의 수준으로 수렴하며, 이 수렴은 정치사회화의 초기 맥락에 의해 조건지워진다. 이 경우, 비인습적 정치참여는 이주 이전의 정치사회화 경험에 의해 영향 받으며, 원주민의 비인습적 정치참여의 수준에 영향 받지 않는다.

전이이론의 핵심은 이민자들이 과거 경험을 이용하여 새로운 환경을 학습한다는 것이며, 이민자들의 주체적 능력을 강조한다. 탈북인의 반세월호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참여를 전이 이론에 비추어 해석해보면, 탈북인들은 과거 수령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무조건적인 충성심이 한국상황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현된 이후 다시 물질적 유인이라는 새로운 기제에 끌려 집회에 반복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이들은 집회에 반복적, 일상적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이슈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박근혜대통령 지지를 표방한 후보에 대한 지지로 발전하는 인식의 변화과정을 밟게 된다. 시위 실천을 통한 몸으로 체득한 학습효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시위로 인한 학습효과를 일으켰다고 추론할 수 있다.

탈북인들이 스스로 시위에 나가게 된 동기를 ‘돈을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한다. 만약 그렇다면, 정치적 쟁점에 대한 알바시위 참여는 한국의 이중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저임금노동시장 안에 갇혀 더 이상 상향이동이 되지 않는 탈북인 빈곤의 문제가 될 것이다. 현 탈북인 노동시장은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단순 일자리 즉 외국인 노동자 대체인력으로만 가능할 뿐 기술을 배워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는 분단노동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의 경우 시위참가를 통해 얻는 하루의 일당이 더욱 절실해진다. 북한의 수령에 대한 충성심,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초기사회화 경험 위에 이제 남한에 와서 ‘현금의 필요성’이

추가된다. 실업이나 생계비 수급상황에서 돈벌이를 위해 나가기 시작한 집회 참석과 시위동원과정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필자의 탈북민 면접에 의하면,¹⁰⁾수령중심적 신민의식에 집회 시위 동원수당과 같은 물질적 유인이 더해지면서 집회에 나가고자 하는 동기는 더 강력해진다. 여기에 탈북인 특유의 집단주의적 연대의식이 더욱 동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이이론에 비추어 본 탈북인의 시위참여를 비롯한 정치참여행위는 북한의 수령의식과 남한의 돈이 결합된 “수령의식과 돈의 화학적 결합”이라고 정식화할 수 있다. 부연하면 처음에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비운의 수령, 박근혜 최고지도자에 대해 가졌던 연민은 동원수당이라는 물질적 요인에 힘입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특정 정당 혹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로 점차 강화된다. 수령의식과 돈의 화학적 결합이다. 탈북인들의 행동의 규정근거는 신민의식, 국가권력, 돈이다. 이는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말하는 ‘내적 식민화’의 논리에 충실한 적응을 의미한다. 핍박과 궁핍에서 벗어나고자 탈북하였지만, 자유, 품위, 안전과 같은 생활세계적 가치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북한 초기사회화에서 획득했던 신민의식은 남한에 온 후 다시 ‘돈과 권력의 체계 논리’와 결합한다.

10) 2017. 6. 21일 필자인터뷰. 40대 탈북여성, 2006년 입국(2005년 탈북)

연: 그런데 그러면 이 박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들 불쌍하게 생각하고 억울하다는 마음이 많아서 태극기 집회 쪽으로 많이 가시게 된 것인가요?(중략)

북: 아 그런 의미에서 간 사람도 많아요. 돈 받고 가서 그 집회에 참가하다 보니깐 그런 감정이 조금 있었는데 거기 가다보니까 더 많아졌겠쎄요.(아 그 얘기가 맞네.)그렇게 된거죠. 저도 티비를 보면서 박근혜가 안됐쎄요. 제가 커피숍에 일하면서 손님들 말을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요 속상해요. 저도 안타까워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손님들하고...가서 진짜 지켜보니까 안됐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돈을 받고 다니면서 학습이 되었겠네요. 그래서 홍준표한테 표를 던지게 되었다?) 그렇쎄요.

V.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국가권력이 수년 동안 탈북인들을 동원하여 행했던 국정원 댓글공작과 알바시위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탈북인의 신민성과 정치참여 행태를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심으로 논의한 질문은 다음이었다. 탈북인들의 신민적 정치지향성은 그들이 북한체제에서 겪은 초기 정치사회화의 효과인가? 아니면, 한국에 온 이후 탈북인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또는 분단체제에서 남북한 주민 양자에게 배태된 분단인 고유의 정치지향성이 특정한 계기를 만나 표출된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분단체제의 남북한 주민의 정치지향성을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캐릭터가면에 기반한 ‘문화가면’의 개념을 사용하여 탈북인과 남한인 양자의 정치지향성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신민 문화가면을 쓴 탈북인이 열 명 중 네 명이라면, 남한인은 열 명 중 세 명이다. 권위주의 문화가면을 쓴 탈북인이 열 명 중 여덟 명이라면, 남한인은 네 명이었다. 비록 탈북인의 신민성이나 권위주의가 남한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남한인의 신민성이나 권위주의 수준역시 결코 낮지 않았다. 이는 분단체제에서 탈북인과 남한인 모두 신민적 문화와 권위주의 문화에 젖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한주민들은 적대적 분단체제와 환경에서 비롯된 동질성을 예상보다 많이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탈북인의 신민적 정치참여를 이주자 정치사회화이론에 비추어 이주이전의 북한사회화의 영향, 탈북이주 이후 남한사회화의 영향, ‘남북한사회화의 전이’로 설명하려고 할 때, 저항이론, 노출이론, 전이이론들은 탈북인의 신민적 정치지향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탈북인의 신

민적 문화 가면은 정치사회화 이론에 의해 그 성격이 더욱 분명해진다. 탈북인들이 쓰고 있는 신민과 권위주의 문화가면은 남한 입국 후 벗겨지기 보다는 오히려 강력하게 씌워지고 있음을 저항이론과 노출이론은 설명한다. 전이이론도 탈북인들이 전근대적 문화가면 위에 새로운 근대적 시민의 문화가면을 덧쓰기 보다는 그들의 특수한 경로적 의존성으로 인해 전근대적 문화가면만이 강화되고 있음을 말한다.

첫째, 저항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탈북인의 반세월호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참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탈북인들은 과거 북한에서 국가의 동원령에 강제로 응하도록 사회화 되었는데, 만약, 이런 특성은 남한에서도 지속되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동원이 지시되면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남한에서 집회 시위에 동원을 하도록 국가권력기관에서 지시를 했을 때는 거절하기 힘들며 북한에서 청소년기와 아동기에 이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 과거 북한에서 당 생활이나 당정치교육을 많이 받은 탈북인들은 국가권력의 동원 요구에 더 잘 응할 것이다. 반면, 탈북청소년이나 청년층은 국가권력의 정치적 동원요구에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같은 저항이론의 관점은 태극기집회에 왜 탈북고령층이 주로 참여했는지 선거 시에도 고령자층을 포함한 탈북인 집단이 집권여당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둘째, 노출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탈북인의 관제시위 참여는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의 국가권력은 보호와 댓가를 동시에 요구하였다.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정치적 동원을 요구했다. 한국의 정치지형은 국가권력의 보호와 동원을 포함한 '비동시적인' 정치문화를 구성한다. 전근대적인 축과 근대적 축이 동시에 공존하는 한국의 정치문화 속에서 탈북인들은 유

독 구시대적인 것에만 노출되고 있다. 탈북인들은 한국에 입국 후 초기 1년간 국정원 합동보호센터(대성공사)부터 하나원,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국가보호 하에 있고, 이 보호기간 동안 탈북인들은 일반 시민사회에 들어오지 못한 채 분리되고 고립된다. 이후에도 탈북인들은 경로적 의존성에 의해 그들만의 세계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처지에 놓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남한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말 남북한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마치 남한의 국정원은 북한 보위부인 듯하고, 남한 경찰관은 북한 보안원처럼 탈북인들을 둘러싼다. 그들의 신민가면은 계속 유지된다. 이러한 선택적 노출로 인해 그들의 신민적 지향은 방해받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셋째, 탈북인의 반세월호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참여를 전이 이론에 비추어 해석해보면, 탈북인들은 과거 수령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무조건적인 충성심이 물질적 유인이라는 새로운 기제에 끌려 집회에 반복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되고, 이들은 집회에 반복적, 일상적으로 나오는 학습과정을 거쳐 이슈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따라서 탈북인의 신민적 정치참여는 북한의 수령의식과 남한의 돈이 결합된 “수령의식과 돈의 화학적 결합”이라고 정식화할 수 있다. 부연하면 처음에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비운의 수령, 박근혜 최고지도자에 대해 가졌던 연민은 동원수당이라는 물질적 요인에 힘입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특정 정당 혹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로 점차 강화된다. 수령의식과 돈의 화학적 결합이다. 탈북인들의 행동의 규정근거는 신민의식, 국가권력, 돈이다. 핏박과 궁핍에서 벗어나고자 탈북하였지만, 자유, 품위, 안전과 같은 생활세계적 가치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북한 초기사회화에서 획득했던 신민의식은 남한에 온 후 다시 ‘돈과 권력의 체계 논리’와 결합한다.

이 세 가지 정치사회화 이론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사회통합적 문제를 제기한다.

먼저, 저항이론에 의하면, 탈북인들의 신민적 정치참여는 독재체제에서 살아온 북한주민의 특성과 동일화된다. 이같은 경우, 향후 남북통합 과정에서 갈등이 예고된다. 오랜 민주화투쟁을 통해 위해 쌓아온 남한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시민적 정치문화는 북한주민의 신민의식과 일상에서 충돌할 것이 우려된다.

둘째로, 노출이론에 의하면, 탈북인의 신민적 정치참여는 분단정치의 한국 상황에서 탈북인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선택의 결과로, 정착환경 자체가 극단적인 비시민적이고 신민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방치 내지는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탈북인 정착정책의 심각한 정책적 실패를 의미하며 향후 정착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전환을 요청한다.

셋째로, 전이이론에 의하면, 북한 초기사회화에서 획득했던 신민의식에 기초하여 남한에 온 후 다시 ‘돈과 권력의 체계 논리’와 결합하는 재사회화가 겹겹이 쌓이는 전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만약, 탈북인의 신민적 정치참여가 이주자로서의 탈북인 고유한 특질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을 막론하고 분단체제하 주민들이 가졌던 공통된 정치참여 행태였다고 한다면, 이는 분단체제의 쇠락과 운명을 함께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경우는 저항이론이나 전이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정치참여행태가 이주이전 북한출신 주민 일반에게 잠재되어 있었던 신민적 지향성의 발현이었을 경우이다. 이는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남한인들이 그간 민주화운동의 역사 속에서 쌓아올린 ‘시민성’과 북한인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신민성’이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격돌할 가능성과 이로 인해 내적통합의 길이 요원해질 것을 예고한다.

【참고문헌】

- 김수암 외.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김연철. “누가 탈북자를 ‘알바 시위꾼’으로 만들었나?” 프레시안 칼럼, 2016.4.27.
- 김지범 외. 『KGSS 한국종합사회조사:2003-2016』.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7.
-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백승영 역. 『우상의 황혼』. 서울: 책세상, 2015.
- 박정서.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 비교 연구: 정치효능감과 정치 신뢰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윤인진 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식 및 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 용역보고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4.11.10.
- 전태국. “공산당 선언 150주년과 맑스주의 재해석.” 『담론 201』, Vol.1, No.3 (1998), pp.11~44.
- 전태국. 『탈주술화와 유교문화(세계화하는 한국의 사회문화)』. 서울: 한울, 2013a.
- 전태국. 『사회통합과 한국통일의 길』. 서울: 한울, 2013b.
- 전태국. “시민성에 기반한 탈북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미발표원고문. 목요도반세미나, 2016.5.9.
- 현인애.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호네틀(Axel Honneth). 문성훈 · 이현재 역. 『인정투쟁』. 서울: 사월의 책, 2011.
- Adorno, Th. W. u. a.,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Studies in Prejudice Series*, Volume 1,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0.
- Alba, R. & Nee, V. “Rethinking Assimilation Theory for a New Era of Immigration,” in: C. Hirschman, P. Kasinitz & J. DeWind (eds),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American Experienc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9, pp. 137~60.
- Almond, Gabriel A./Verba, Sidney.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1963.
- Bilodeau, A, McAllister, I. & Kanji, M. “Adaptation to Democracy among Immigrants in

- Australi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1(2) (2010) pp. 141~165.
- Black, Jerome H. "The Practice of Politics in Two Settings: Political Transferability among Recent Immigrants to Canada,"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4) (1987), pp. 731~754.
- Bourdieu, Pierre. *Die feinen Unterschiede. Kritik der gesellschaftlichen Urteilskraft*, Frankfurt am Main, 1987.
- Bueker, C.S. "Political Incorporation Among Immigrants from Ten Areas of Origin: The Persistence of Source Country Effec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9(1) (2005), pp. 103~140.
- Collett, Christian. "The Determinants of Vietnamese American Political Participation: Findings from the January 2000 Orange County Register Poll,"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sian American Studies*, Scottsdale, AZ, 2000.
- Fenner, Christian. "Politische Kultur," in: *Wörterbuch Staat und Politik*, hrsg. von Dieter Nohle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3.
- Hartfiel/Hillmann. *Wörterbuch der Soziologie*, Stuttgart: Kröner, 1972.
- Horkheimer, Max. *Studien über Autorität und Familie*, Paris, 1936.
- Huffman, Terry. "Resistance Theory and the Transculturation Hypothesis as Explanations of College Attrition and Persistence Among Culturally Traditional American Indian Students," in: *Journal of American Indian Education*, Vol. 40, No. 3 (2001), pp. 1~23.
- Institut für Sozialforschung, *Soziologische Exkurse. Nach Vorträgen und Diskussionen*, 3. Unveränderte Auflage 1974, Frankfurt am Main- Köln: Europäische Verlagsanstalt, 1956.
- Just, A. and Anderson, C. "Immigrants, Citizenship and Political Action in Europ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 (3) (2012), pp. 481~509.
- Klapper, Joseph T. *The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Free Press, 1960.
- Mannheim, Karl. *Mensch und Gesellschaft im Zeitalter des Umbaus*, Darmstadt, 1958.
- Marx, Karl, 1867: *Das Kapital, Erster Band*, Karl Marx/Friedrich Engels Werke(MEW), Bd. 23, 1979, Berlin: Dietz Verlag(= MEW 23).
- Marx, Karl, 1877, "Marx an Wilhelm Bloß"(마르크스가 빌헬름 블로스에게 보낸 편지, 1877년 11월 10일) *Karl Marx/Friedrich Engels Werke(MEW)*, Bd. 34, 1979,

- Berlin: Dietz Verlag(= MEW 34).
- Niemi, R.G. and Hepburn, M.A. "The Rebirth of Political Socialization," *Perspectives on Political Science*, 24(1) (1995), pp. 7~17.
- Nietzsche, Friedrich Wilhelm, 1889: *Götzen-Dämmerung*, Köln: Anaconda Verlag, 2008.
- Park, Jung Suh, "Political Attitudes of North Korean Adolescent Migrants and the Task of Social Studies Education," 『시민교육연구』, 44(1) (2012), pp. 25~50.
- Park, Robert Ezra, *Race and Cult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50.
- Ramakrishnan, K. and Espenshade, T. "Immigrant Incorpor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5 (3) (2001), pp. 870~909.
- Scherr A. "Randgruppen und Minderheiten," In: Schäfers B., Zapf W. (eds) *Handwörterbuch zur Gesellschaft Deutschlands*,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1.
- Sears, D. and Funk, C. "Evidence of the Long-term Persistence of Adult's Political Predisposi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61(1) (1999), pp. 1~28.
- Tijana, Prokic-Breuer/M. Vink, D. Hutcheson and K. Jeffers, "Socialization, Naturalization and Immigrant Political Participation in Europe: Testing Transferability Theory," University College Dublin's Schoo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PIRe Seminar Week 9, Thursday November 15th, 2012.
- Verba and Nie,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 Weber, Max, 1904. "Die 'Objektivität' sozialwissenschaftlicher und sozialpolitischer Erkenntnis," in: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7. Aufl., Tübingen: J.C.B.Mohr(Paul Siebeck) Verlag, 1988, S. pp. 146~214.
- Weber, Max, 1904/05.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in: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9. Aufl., Tübingen: J.C.B.Mohr(Paul Siebeck) Verlag, 1988, S. pp. 17~206.
- Weber, Max, 1915, "Die Wirtschaftsethik der Weltregionen. Vergleichende religionssoziologische Versuche, Einleitung." (세계종교의 경제윤리. 비교종교사회학적 시론. 서문), in: Max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9. Aufl., Tübingen: J.C.B.Mohr(Paul Siebeck) Verlag, 1988, S. pp. 237~275.
- White, S., Nevitte, N., Blais, A., Gidengil, E. and Fournier, P. "The Political Resocialization of Immigrants: Resistance or Lifelong Learning?"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1 (2) (2008), pp. 268-281.

Wong, Janelle S. "The Effects of Age and Political Exposure on the Development of Party Identification Among Asian American and Latino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in: *Political Behavior*, Vol. 22, Issue 4 (2000), pp 341~371.

Zajonc, Robert. "Attitudinal Effects of Mere Exp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 (1968), pp. 1~27.

Subject Political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Kim, Wha-soon (Hanshin University)

Jeon, Tae-kook (Kangwo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explore the subject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of North Korean defectors for many years in the previous government, which could have been observed in their paid extreme right-wing political activities mobilized for hyper pro-governmental demonstrations and illegal clandestine operation of 'troll farm' by NIS as part of a part-time job. Should we account such subject political behaviors of North Korean defectors revealed in the process of mobilization of state power to be an eruption of the political orientations specific to the groups sharing an experience of 'escaping from North Korea'? Or is it correct to generalize such subject political attitudes as a national trait of North Koreans influenced by early political socialization in North Korea? Is it proper to regard this subject political participation as the result of their rational choice to survive in the South Korean situation? Or an expression of the unique political orientation of both Koreans due to the divided system? These question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social integration of the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standing at the door of the transition process to peace system. In this study, based on the Marx's concept of 'character

masks' and cultural masks as its application, we compared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We interprete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light of the immigrant political socialization theories. We compared explanatory power of resistance theory, exposure theory, and trasferability theory.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subject political participation, character masks, cultural masks, resistance theory, exposure theory, transferability theory.

김화순(Kim, Wha-soon)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과를 졸업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인력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에서 박사후 과정을 거쳐 현재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생존의 정치: 북한의 ‘공장사회’와 노동자”(2018), “체제이행기 북한 여성노동의 존재양식”(2015), “북한 일유형이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에 미친 영향”(2014) 등이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분단체제의 노동: 북한출신주민이 경험한 남북한의 직업세계』(선인, 2018),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변동과 취업지원정책의 평가』(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13) 등이 있다.

전태국(Jeon, Tae-kook)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사회학회 회장, 한국사회학회 창립 및 초대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이며, 정년퇴직 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강의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독일의 사회통합과 새로운 위협』(공저, 한울, 2017), 『사회통합과 한국통일의 길』(한울, 2013), 『독일통일과 동독 권력 엘리트』(공저, 한울, 2011), 『민족통일과 사회통합.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미래』(공저, 사회문화연구소, 1999),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독일통일과 동구변혁』(한울, 1998)가 있다.